

김호규 위원장, 금속산별 완성 후 최초 재선

김용화 수석-정원영 사무처장 동반 당선 ... 김동성 비정규 할당 부위원장 당선, 10-12일 부위원장 결선



금속노조 11기 위원장에 김호규 현 위원장이 당선됐다. 2007년 금속노조 산별 완성 이후 첫 위원장 재선이다.

12월 6일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수철)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노조 11기 임원선거 투표 결과 기호 1번 김호규-김용화-정원영(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 조가 득표를 54.92%를 얻어 당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재적 조합원 17만5천494명 가운데 13만7천742명이 투표해 투표율 78.48%를 기록했다. 이 중 김호규(현대차지부 5공장)-김용

화(기아차지부 판매지회)-정원영(충남지부 개별) 후보 조가 7만5천643표(득표율 54.92%)를 받아 결선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기호 2번 이양식-김유철-이선임 후보 조는 5만6천208표(득표율 40.81%)를 얻었다.

비정규직 할당 부위원장은 단독 출마한 김동성 후보가 11만7천715표(득표율 85.49%)로 당선됐다. 여성명부 부위원장 선거는 후보 등록한 조합원이 없어 진행하지 못했다.

다섯 명을 선출하는 일반명부 부위원장 투표에 과반 득표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

다. 득표 순서대로 기호 1번 정주교(6만5천701표, 득표율 47.7%), 기호 5번 양기창(5만8천285표, 득표율 42.31%), 기호 8번 이승열(5만4천314표, 득표율 39.43%), 기호 2번 엄교수(5만4천45표, 득표율 39.24%), 기호 10번 엄강민(4만7천716표, 득표율 34.64%) 후보 5명이 2차 투표에 진출했다.

찬반으로 진행되는 일반명부 부위원장 선거 2차 투표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시행하며, 과반수 이상 득표하면 당선된다. 금속노조 11기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다.

노동부, 사업주 불법행위 “규정 없다” 불구경

산재 노동자 불이익 금지법 조항, 조사·처벌 기관 없어 무용지물 ...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해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차별하는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 노동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법 관련 업무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없는 업무”라며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주를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와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12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산재보상법 위반 수사 권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명시 및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산재보상보험법 위반 수사와 처벌 권한 명시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 사업주 엄중 처벌 ▲산재 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개입해 조치하면서, 산재보상보험법 위반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없기 때문에 노동부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산재보상보험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벌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고 있다며, “사업주가 법을 어겨도 감독하고 처벌할 기관이 없어 산재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경찰은 산재법 위반 고발이 들어오면 ‘산재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조사하나’라고 반문하는 현실이다”라고 개탄했다.

2016년 12월에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은 111조의 2(불이익 처우의 금지)조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규정 없다” 방치, 경찰은 “모르는 법” 방치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나와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 사례를 증언했다.

오동영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 지회 부지회장은 사측이 강제휴직과 강제전환 배치, 재할 프로그램 배제, 비급여 항목 차별 등 방법으로 산재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증언했다.

오동영 부지회장은 “한국타이어 사측은 강제휴직을 거부한 산재 노동자들이 출근해도 업무를 주지 않는다. 강제휴직은 보통 2-3개월 걸리는 산재 처리 기간 동안 노동자를 임금으로 압박해 산재 신청을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다”라고 지적했다.

오동영 부지회장은 “한국타이어는 산재 치료를 마치고 복귀하는 노동자에게 별도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하고, 생소한 공적으로 발령해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한국타이어는 공장 처리한 노동자만 재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급여 치료항목을 지원하며 산재 신청 노동자

와 차별하고 있다.

정석 노조 광주전남지부 기광산업지회장은 부당한 공장간 전환배치 사례를 고발했다. 정석 지회장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7월 20년 동안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한 노동자가 무리한 반복 작업으로 무릎 관절염에 걸려 산재 치료를 받은 뒤 복직을 요청하자 2공장에서 1공장으로 강제 배치했다.

산재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건강 상태를 고려한 배치라며 거부했다.

기광산업지회는 금속노조 조합원인 산재 노동자를 조합원이 없는 공장으로 배치해 탈퇴나 사직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을 삭감하고 연월차를 축소하며 산재 노동자를 압박했고, 견디지 못한 산재 노동자는 결국 공장을 그만뒀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최창영 조합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당한 산재 불이익 처우를 증언했다. 최창영 조합원은 지난 6월 14일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며 작업복 안으로 들어가 오른팔에 심제성 2도 화상을 입고 산재 승인(취업 치료)을 받았다.

취업 치료 승인을 받으면 통원 치료를 받은 날은 안정과 치료를 위해 회사에 나가 근무하지 않아도 휴업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최창영 조합원이 통원 치료를 받은 날을 결근으로 간주하고 아무 동의 절차 없이 연월차 휴가를 일방 적용했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사업실장은 “산재 노동자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사측은 산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차, 3차, 4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며 “노동부는 단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어긴 사업주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